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한 국익

학 교급식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다.

구태여 수년전의 사례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최근 기사에는 연일 학교급식 관련 기사들로 장식되어 있다. 납품업체의 수익원대 상납비리부터 아이들의 집단 식중독, 급식소 운영상의 재정적 문제 등을 다루는 내용의 기사들이 연례행사처럼 신문 지면과 매스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중 아이들의 건강에 직접적 악영향을 주는 식재료문제는 공급·관리상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식중독 발생건수는 2003년 한해만도 8,038건이나 되며 대부분이 학교급식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만큼 학교급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재료에 대한 공급·관리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실시한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학교급식의 질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12.8%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급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29.9%), 비위생적이다(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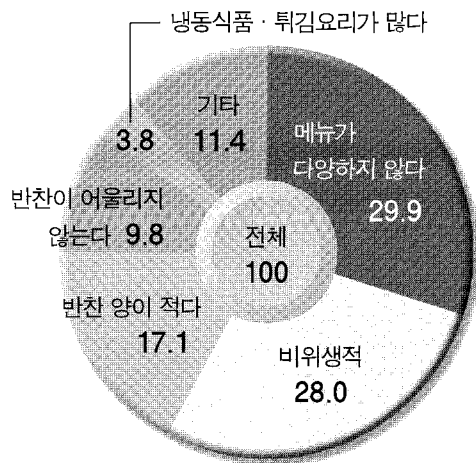
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식재료의 공급과 관리상의 문제가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값싼 외국농산물에 있다.

〈 학교급식 여론조사 도표 〉

■ 학교급식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학교급식 납품비리 언제까지(경향신문 2004.4.8), 급식업체 원산지표시 ‘멋대로’(동아일보 2004.4.1), 학교급식소 국산둔감 수입 농축산물 기승(파이낸셜뉴스 2004.3.31), 학교급식에 가짜 한우 대량 납품(KBS 2004.3.5),

학교급식으로 식중독 36%발생(MBN뉴스 2004.1.9), 식중독, 수의계약 위탁급식서 많아(YTN 2003.12.12), 학교급식 불만 47.6%(한겨레 200.3.11.23), 학교급식은 식중독 온상(중앙일보 2003.11.18)”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급속도로 열리기 시작한 우리 농산물시장은, WTO에 이어 칠레와의 자유 무역협상 타결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다. 외국농산물 수입업체는 면허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난립하기 시작했고, 밀수와 보따리상들의 의식 없는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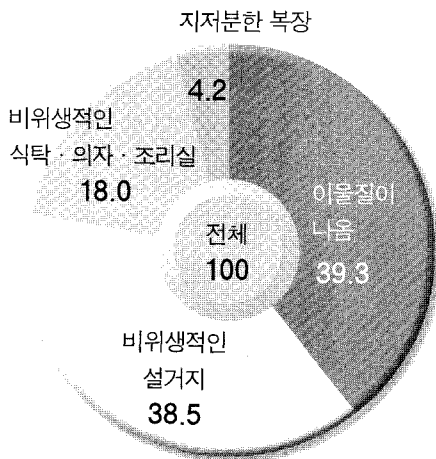
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는 종류도 다양해져 전 품목에 걸쳐 수입 아닌 농축산물이 없을 지경이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김치가 약 2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가량 늘어났고, 양념고추는 9만톤으로 지난해보다 세배나 증가했다. 밀수나 보따리상에 의한 수입량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 말까지 김치 80개 업소, 고춧가루 2백84개 업소, 당근 2백45개 업소 등 모두 9백6개 업소가 국내산 둔갑판매로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는 2002년 6백28개 업소보다 44%나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한 학교급식 업체는 고등학교에 육류를 납품하면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입찰 단가를 속여 차액을 남기려다 구속되기도 했다.

그런데 수입산이 국산으로 단순히 바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해로

■ 학교급식이 비위생적인 이유는?



운 화학약품을 첨가하는 비양심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산 고사리를 산성 아황산나트륨과 같이 끊여 팔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수입 딸기에서 발암성 살균제로 알려져 있는 '캡탄'이 검출되는가 하면, 고엽제를 뿌린 레몬, 통째로 농약에 담가 수출하는 체리 등이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잔류농약에 의한 발암의 위험성에 대해 미국의 연방연구회의가 발표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미국 내 유통되는 농산물 중 발암성이 있는 28개 농약이 허가되어 있는 농산물에 허용치 정도를 잔류했다 하더라도, 미국인 연간 약 2만명이 발암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자국 내 유통되는 농산물이 이런 상황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는, 보관과정이 긴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현재 전국 9,989개 학교 654만여명의 학생들이 먹고 있는 학교급식은 바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축산물개방정책이 국익을 고려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국익은 바로 국가의 미래라고 말로만 떠들어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현실은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값싼 외국농산물이 학교급식재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운영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위탁급식이다.

위탁급식이란 위탁급식 업체가 학교와 계약을

맺고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교측은 1억원이 넘는 기본 시설투자비(식당, 조리실 등)를 들이지 않고 음식의 질에 대한 책임도 벗을 수 있어 현재 일반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다. 문제는 위탁업체들이 보통 3년 정도 맺는 계약기간 동안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값싼 음식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다. 사기업의 특성상 아이들의 건강보다는 음식 원가를 낮추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직접 급식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직영방식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학부모부담을 이유로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학교급식의 근본적인 질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학교급식에 수입농산물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수입 농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대안



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실효성은 별반 크지 않다. 이는 아직 제도적으로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을 위해 다음 네 가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첫째, 음식을 가공해 판매하는 식당이나 급식업체는 국산과 수입산을 나누어 표기해 판매토록 해야 한다. 또한 식당은 농산물 품질관리 단속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식당도 단속 대상에 넣어야 한다.

둘째, 단속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속업무가 시·군청,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나뉘어 분산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중복 단속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중심으로 업무를 통합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산지와 소비자들 간에 직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시·군이 나서 고향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펴고 농협이 직판장을 대폭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넷째, 관계기관은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언론과 연대해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백화점 같은 곳에 홍보 자료를 비치하는 것도 좋겠다.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에 대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식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습관, 명랑한 사교성의 함양, 식생활의 합리화, 영양의 개선과 건강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총체적 교육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것이며 학교급식은 그러한 법제정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급식등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학교급식법 제1조의 법제정 목적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 봐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해 수십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국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www.schoolbob.org)'로 알려져 있는 운동단체는 이상적인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급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 확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안전한 식재료 확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의 급식참여 등을 주장하고 있다.

●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전국 활동현황 (2004년 3월31일 현재)

지역	운동본부 구성	비 고
서울	44개 단체	10월 1일 출범식 및 기자회견, 대표자 증명 교부,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18개구에 운동본부 구성됨. 10월 28일 주민발의 선포식 가짐. 11. 19일 조례제정 공청회, 현재 약12만명서명-지역특명초치/ 서명작업완료 - 3월31일 청구 (416258명)/ 용산, 금천, 노원 구로 청구
부산	13개 단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민운동 본부」로 활동, 조례운동 준비 중
인천	22개 단체	친환경 농산물 사용, 직영무상급식 내용조례안작성, 10월 17일 공청회 -인천시내 학교 중 시범운영을위한 예산확보(교당 3000만원) -실무협의 중 / 현재 청구인수 초과됨-12월26일 청구/ 농정과검토의견-연대와 충돌(우수농산물규정필요,개정급식법시행령위임사항만규정필요-시설 및 종사원 내용삭제 요청, 시예산1%지원요청내용삭제요망,급식관리센터설립삭제요망-급식운영위소관업무조정리조치, 시 검토안 제출) / 인천지역 친환경급식시범학교(3억3천만원예산 군·구당 1개교 해당교육청신청학교-총9개 학교 9개 품목)
대전	6개 단체	4월 충남대전 본부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분리됨. 의원발의 제정, 현재 구조재제정 운동 진행 중
대구	26개 단체	9월 19일 출범, 기초자치구 단위 본부 구성/ 주민발의 준비 중 12월16일 시민토론회-조례안 발표 / 15000 서명
광주	26개 단체	2002년 12월 출범, 교육위원발의-만장일치통과→교육감제소→재심의→11월8일 교육위 개정 통과→14일 시의회로 이첩 - 교육사회위원회 심의 계류 중
울산	29개 단체	7월 2일 출범, 7개 기초자치단체 본부 구성, 미묘한 관계로 전체 소강상태임, 울산동구는 청구함.
경기	20개단체와 13개지역본부	10월 1일 출범/ 12월10일 공청회 조례안 발표, 내부토론거쳐 도조례와 교육위조례 분리추진/ 안성,안양,남양주,구리(10억예산투자), 의정부청구, 이천,김포,성남도 별도 진행중, 3월 30일 청구(16만명)
강원	춘천, 원주	도 단위 본부는 없음, 원주·춘천(조례청구) 운동본부 활동 중
충북	30개 단체	9월 2일 출범, 교육위에서 청원했으나 무산, 현재 주민발의 준비 중,, 도교육위조례안확정으로 시민단체와 이견 대립 중, 도교육위는 12월19일 조례통과 함, -현재 시민단체서명중 교육위조례계류, / 진옥경교육위원 발언문제로징계/ 충주는 조례청구대표증명 반려후 성명발표 다음날 대표자증명서발부-조례공청회12월5일 하고 10일에 조례안제출청구 - 원래서명인구 4600명이나 7150명서명 받아 냄-의회거부-1인시위 및 의원면담등 다양한방식으로 운동 중, 영덕별도청구 진행 중
충남	9개단체와 5개자치본부	11월4일 도본부 출범이후 소강상태, 천안1월, 청양3월 청구, 홍성, 논산, 아산 운동본부, 출범-서명 진행 중, 공주본부 구성 준비 중
경북	14개단체	도의회와 도청에서 중심적으로 준비, 한나라 의원 발의(시민단체 반대 의견 있음)→계류, 주민발의 형식으로 도의원 안을 수정, 제정 촉구지원, 의원 발의안 부결, 수정안으로 도의회에 제출, 12월 21일까지 회기여서 이후로조례검토미룸, 도의회통과(최초 의원발의)-제정공포안해 현재 운동중에있음. 안동, 구미 서명 진행 중
경남	18개 단체	6월 27일출범, 진주 별도 주민발의 진행 중, 창원은 대표자 교부 안 해줌, 조례제정 발의 위한 도보순례행진, 10월13~25일 전개, 도교육위 청원 무산, 농성 준비, 도교육위발의, 11월11일 제정. 12월29일 도의회통과 진주는 이미 3개월앞당겨 12월4일 청구-원래서명인구 5600명이나 9800명을 받아 청구 / 김해,양산 제정-김해조례반려됨/도조례 역시 제소위기-진해, 창원,거제,밀양 4개도시 순회음악회(노래사람이성원과 함께)진행중=어려운 운동을 축제로 전환하여 주민의 힘과 역량을 재조명하는 뜻 깊은 행사로 인식제고.
전북	23개 단체	2002년 5월 출범, 도 교육위 만장일치 통과(8월28일), 교육청 계류 중에 있다가 전남의 재의 명령 이후 조례안을 재수정(우수농산물로)하여 다시 만장일치 통과함(10월2일), 10월30일 도의회 통과, 11월14일교육감(지방자치법15조위배,WTO위배,공정거래법위배)재의요청 -도의회회기중이어서 12월16일 재통과.- 대법원제소 됨 // 현재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소송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 계획에 있음
전남	총180단체	2월 25일 출범, 주민발의 4월, 조례제정 9월5일(3차 수정), 15개광역단위 본부 구성, 현재 행자부 재의요청 건으로 연대 투쟁 → 11월10일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입법예고의 성과를 거둠.-실무협의회구성, 회의 // 125억예산 (도70: 지자체30)으로 오는 9월중부터는 실제 학교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예정에 있음.
제주	30개 단체	10월 11일 출범, 민관 합동 친환경 농산물 급식추진협의회 구성, 100% 직영의 지역 특성 가짐, 친환경 급식 조례안 확정-11월24일 주민발의 조례제정선포 / 아라중-친환경농장에서 직접공급 / 2004년 5000명 학생 친환경급식시범실시 도와 합의함. - 1월 청구 // 아라중학교, 한라초등학교 친환경급식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축제행사 가짐(이성원 참여) / 3월31일 실무협의 (조례규칙심의 위원회 검토의견서 부정적)

작년 9월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민 발의로 제정되었고, 뒤이어 전라북도와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조례제정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 또한 조례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무총리실에서 '학교 급식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조례제정운동으로 제기된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농산물을 급식재료

로 사용하는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위탁급식 업체들의 반발과 예산문제 때문에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시키는 데도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농연은 '학교급식법개정 및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 운동본부' 참여 단체로서, 국내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향후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동 방향을 잡고자 한다. **한농연**

2004년 학교급식법개정 및 조례제정을 위한 한농연 활동 방향

○ 학교급식법개정 운동 전개

한농연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앙단위에서는 학교급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법개정 쟁취에 목표를 두고, 총선 이후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한 의원발의 법개정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개정 주요요구사항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국내농산물 의무사용과 정부의 재정지원근거 조항 마련 등으로, 이는 지역조례제정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 지역조례제정운동 조직화

지역조례제정운동은 앞서도 얘기 했듯이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여론형성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례제정운동이 주민발의를 통해 여론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활동지침과 조직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 산하연합회 조례제정운동 적극 참여

지역단위 산하연합회는 지역 운동본부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전남, 경남의 경우 활동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직적 움직임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조직운동으로 승화시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